

다산포럼



김한영  
지식 칼럼니스트  
데일리인베스트 대기자

'걸리버 여행기' (1726)의 작가 조너선 스위프트 (1667-1745)는 "비교 없이는 어떤 것도 위대하지도 하찮지도 않다"고 말했다.

비교하지 않으면 대소(大小)뿐만 아니라 선악(善惡)도 미추(美醜)도 냉온(冷溫)도 없다. 진위(眞僞)나 미오(迷悟)도 없다. 비교와 관련되지 않은 것이 없다. 비근한 예로, 의대 진학에 안간힘을 다하는 이유도 의사라는 직업이 다른 직업과 비교했을 때 유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수십 년 전, 남학생의 키를 기준으로 한 분류인 '키도 크다, 키만 작다, 키만 크다, 키도 작다'는 비교의 한 예이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들조차 최소한의 민주주의 교육을 했다. 교과서에서 배운 민주주의와 현실을 비교한 국민·유권자들은 수차례 들고 일어났다. 또 국민·유권자는 대통령들이 남긴 정책과 유산을 비교하며 평가한다.

비교는 자연스럽다. 의식과 함께 무의식도 비교한다. 인류는 비교와 함께 진화했고 생존했다. 비교는 일상에서 빈번하게 작용한다. 사람의 생각에서 색소보다

비교 예찬

비교의 비중이 더 높다. 한때 남자는 '7초에 한 번 섹스 생각을 한다'는 말이 유행했다. 요즘 가장 신빙성 있는 설은 남자가 하루에 19번, 여자의 경우 10번 섹스 생각을 한다는 것이다. 반면, 한 연구는 인간 사고의 약 10%가 비교와 관련된다고 추정한다.

비교가 본질이며 필연인 만큼, 올바르고 효율적인 비교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잘 비교하는 법을 교육해야 한다. 어떤 비교의 결과가 차이를 낳아서는 안 된다는 것도 가르쳐야 한다.

개인과 나라의 발전을 위한 지식은 학문에서 나온다. 비교는 학문의 핵심이다. 비교경제학·비교교육학·비교문학·비교법학·비교사학·비교언어학·비교정치학 등 아예 비교를 중심적인 방법론과 연구 대상으로 하는 학문 분야도 많다.

비교사학은 다수에게 친숙한 비교 학문이다. 영국 사학자·국제정치학자 E. H. 카(1892~1982)는 '역사란 무엇인가' (1961)에서 "과거·현재·미래는 끝없는 역사의 사슬 속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했다. 과거·현재·미래를 연결하는 것은 비교다. 학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비교를 통해 국가와 사회를 위해 요긴한 유사점·차이점, 교훈, 보편성·특수성을 발견한다.

국가·사회, 그리고 비교의 관계는 일반적으로 긍정적이다. 개인과 비교의 관계는 이중적이다. 하기 나름이다. 비교 학문과 달리, 개인의 삶 속에 등장하는 과거와 미래는 부정적으로 작용하기 쉽다. 이상적으로는, 과거 성취를 회상하며 자신감을 얻고, 이를 기반으로

희망찬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하지만 자칫 과거의 나쁜 기억이나 미래 걱정 때문에 빠지기 쉽다.

그래서 불교와 명상은 "과거에 머물지 말고, 미래를 꿈꾸지 말고, 현재의 순간에 마음을 집중하라"고 권한다. 비교가 집중을 방해하는 본심이기 때문이다. 예수 또한 이렇게 말했다. "내일 일은 걱정하지 마라. 내일 걱정은 내일에 맡겨라. 하루의 괴로움은 그 날에 겪는 것만으로 족하다."(마태오의 복음서 6:34)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나보다 나은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상향 비교'는 성취동기가 될 수 있지만, 질투심·열등감 등 리스크가 따른다. '하향 비교'는 행복감이나 감사하는 마음 등 부분적으로 정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이처럼 개인 차원에서는, 현재에 집중하고 남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는 것이 행복을 유지하는 중요한 덕목이다. 그러나 행복과 성공은 겹치지만 다르다. 성공을 위해서는 어제·오늘·내일을 넘나들며 비교해야 하는 것 같다. 행복은 '현재의 성공에 만족하는 것'으로, 성공은 '행복이 잠시 깨지더라도 지속적으로 목표를 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국가적 또는 개인적 차원에서 '비교영웅학'(comparative hero studies)을 활용해 영웅적 행동과 가치를 탐구하는 것이 유익할 수 있다. 영웅(英雄)은 '지혜와 재능이 뛰어나고 용맹하여 보통 사람이 하기 어려운 일을 해내는 사람'이다. 내가 가진 자, 집, 직장을 남들의 것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외 세계적인 영웅들을 비교해보고 내 인생에 벤치마킹할 것은 없는지 살펴보자.

社說

1년 이상 지체된 '혁신도시 시즌2' 서둘러야

애초 계획보다 1년 이상 늦춰진 '공공기관 2차 이전'이 사실상 또다시 미뤄지면서 이전 대상지인 광주·전남, 부산, 강원, 제주 등 전국 지자체들의 반발과 허탈감이 커지고 있다. 공공기관 이전을 지방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뚜렷한 정책이 없는 만큼 공공기관 2차 이전은 현 정부가 선언한 '지방시대' 완성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추진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전남도에 따르면 정부가 2023년 하반기 이전 시작 계획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는커녕 '혁신도시 성과 평가 및 정책 방향'에 대한 연구용역 기간을 내년 10월로 연장했다고 한다.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밀그림 발표를 연기했던 것을 포함하면 벌써 두 번째 연기이다. 정권 출범 초기

국정과제로 '지방시대'를 선언했던 것에 비춰보면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의지가 있기는 한 것인지 지자체들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남도는 공공기관 1차 이전으로 국내 최대 공기업 한전을 얻어 에너지 신산업을 지역 주축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터라 2차 이전의 연기는 충격적 수밖에 없다. 특히 공공기관의 이전 비율이 호남권은 8%(31개)로 수도권 44%(162개)·충청권 24%(88개)·영남권 20%(72개) 등에 비해 턱없이 낮은 만큼 2차 이전이 없는 나주 광주·전남공공혁신도시는 성공이 불가능하다.

사사건건 다투던 여·야도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 공동화를 막을 수 있는 대안이라며 한목소리로 정부에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촉구하고 있다. 현 정부가 지방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면 여·야의 요구를 수용하는 차원에서라도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서두르길 바란다.

금전적 장려보다는 출산·분만 인프라가 시급

광주시가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각종 출산·육아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정착 의욕이 관 인프라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이 1일 공개한 '2023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분만실, 신생아실 등 출산 관련 의료 인프라가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조사됐다.

광주의 특수진료실 중 '분만실'은 43병상에 불과했다. 전국 1757병상 중 2.4%에 불과하다. 대전(68병상)의 3분의 2 수준에 그쳤다. 전남의 분만실 역시 34병상에 머물렀다. 광주·전남은 세종(14병상), 제주(15병상)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 네 번째로 병상·병상 수가 적었다.

신생아실 역시 마찬가지다. 광주의 경우 132병상으로 세종(48병상), 제주(66병상)에 이어 가장 적은 병상 수를 보였으며 전남의 신생아실은 168병상으로 전국 하위 5위였다. 산부인과 의원 수도

광주 36곳, 전남 19곳으로 턱없이 부족했다.

광주·전남 분만 건수 역시 3년 연속 하락했다. 광주는 2021년 1만 809건에서 2만 2023년 9310건으로 줄었고, 전남 분만 건수는 세종(2605건), 제주(3118건)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적었다. 이렇다 보니 임신부들은 원정출산에 나서고, 산부인과는 경영난에 문을 닫으면서 출산 인프라는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

분만 인프라가 무너지지 않게 하려면 의료 수가 인상 등 필수 의료분야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따라야 한다. 또 분만 건수 하락은 신혼부부를 비롯한 젊은 세대가 타 지역에 유출되는 현상과도 연관이 있는 만큼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관련 정책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아이 낳기 좋은 도시'는 금전적 지원도 좋지만 출산 의료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 우선이다.

無等鼓

'.../나머지 임기 절반을 마저 맡겼다 가는 사람도 나라도 거덜 나갠거에 "더 이상 그는 안 된다"고 결론을 낸 것입니다/사제들의 생각도 그렇습니다/.../하여 묻습니다. 사람이 어째서 그 모양입니까?/.../.'

육현진 광주대학교장(대주교)을 비롯, 천주교 사제 1466명이 참여한 '어째서 사람이 이 모양인가'라는 제목의 시국 선언문 내용 일부다. 전국 곳곳에서 시국 선언이 쏟아지고 있다. 대학가는 지난 10월 28일 가천대를 시작

1986년 고려대 교수(28명)들의 시국선언은 전국 29개 대학 785명의 교수들이 참여하는 시국선언으로 이어졌고 1987년 6월 항쟁의 물꼬를 텄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빠지지 않았다. 시인 조지훈은 '지조론'에서 '정(正)과 사(邪)가, 의(義)와 불의(不義)가 뒤죽박죽이 된 세상을 백성 앞에 분명히 흑백을 가려 줄 사람이 누군가. 지성인을 두고 이 일을 능히 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고 하지 않았다.

시국선언

최근연 시국선언만큼 선언문 내용도 관심을 받는다. '텍스트힙'(text-hip)이 유행하면 시국선언문 중 공감하거나 마음에 드는 문장을 사진 찍어 소셜미디어에 올린다. 텍스트힙은 글을 다루는 게 멋있고 개성 있다는 의미의 신조어다. "나는 폐허 속을 부끄럽게 살고 있다"로 시작하거나(경희대), "말할 것들! 권력이나 쥐었다 그 자리에 들면 못된 일만 꾸뻤다가 아침 밝기가 무섭게 해치우고 마는 이 악당들이"(연세대) 등은 "울림"을 준다는 반응이 많다. /김지을 정치부 부장 dok2000@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편집인 崔宰豪   논설실장 蔡熙鍾   편집국장 崔權一   제작국장 柳濟堯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시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자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24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4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48	여론매체부 220-0661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64	사진부 220-0693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제2사회부 220-0680	디지털부 220-0697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꿈꾸는 2040

공수 전환 예산정국이 심상찮다



정달성  
위민연구원 상임이사  
광주 북구의회 의원

현재 예산정국이 심상치 않다. 예산 편성권을 쥐고 있는 정부와 그를 심사하는 국회의 공수가 전환된 상황이 어색하기는 하지만 반가움을 금할 수 없다.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677조 4000억 원)에서 4조 1000억 원을 감액한 수정안이 통과됐다. 그리고 12월 2일 본회의에서 수정안이 통과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으로 여야가 10일까지 합의해 달라는 요청에 잠시 시간은 벌었지만 해결 국면은 요원하다고 본다.

정점은 특수활동비, 예비비이다. 참고로 투명하지 않게 집행되어 왔기에 '쌈짓돈'이라고 할 수 있는 이른바 특별비, 예비비 등을 삭감한 것이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뜬금없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보여 많은 국민들을 의아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그 동안 약 6개월여간 민심을 반영해 새롭게 구성된

22대 국회가 대통령실과 정부의 권한에 맞서 싸우면서도 무소불위의 대통령 거부권과 검찰권력의 벽에 번번이 부딪혀 한계가 있었다. 25년의 법안 거부권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번 예산정국을 거치면서 방어만 하던 국회가 아닌 야당이 불필요한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하면서 공수가 전환된 것이다. 갈자루의 칼 쪽을 잡고 있어도 민심과 함께하면 공격도 하고 승리도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멋진 사례이지 않은가!!

애초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은 초부자감세를 위한 예산이자 민생과 경제, 미래 대비에 관심이 없는 민생 포기, 미래예산 포기 예산이어서 근본적인 문제였다.

대통령실, 검찰 등 권력 기관의 쌈짓돈은 늘리고 민생 사업 예산을 24조 원이나 삭감한 특권 유지 예산이었고, 야당이 감액한 예산은 대통령비서실과 검찰 등 권력기관 특별비 전액과 과도하게 편성된 예비비 2조 4000억원이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대통령실은 특별비 등 4조여 원을 감액해서 민생과 경제가 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악의 세수 펑크난 책임을 돌아보기는커녕 내년에 일을 할 수가 없다고 하며 야당의 발목잡기라며 우는 소리를 하지만, 소가 웃을 일이다.

그간 검찰의 특수활동비는 눈먼 돈, 주머니 쌈짓돈처럼 사용됐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시민단체 등이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검증을 위해 소송까지 제

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숨길 것이 많았던지 자료 제출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오히려 국회의 기본 권한이자 의무인 예산 심의권을 회박하고, 민심을 받든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잠시지만 공수가 전환된 것도 결국 그들의 가장 약한 고리가 그들만의 자금줄인 특별비 등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라 아닐까 한다.

혈세를 눈먼 돈처럼 사용해온 특수활동비 예산안 삭감 투쟁은 끝이 아닌 시작이어야 한다. 특검을 통해 은폐를 밝히고 바로잡아야 한다. 국정조사 등을 통해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야 한다.

정부 여당은 특별비 등의 삭감에 그들 스스로 왜 이토록 날뛰는지 국민들이 목도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이럴 때 일수록 민심을 반영한 국회는 민생과 경제, 미래 대비에 관한 예산 등을 활성화를 위해 기본적인 길을 가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 너무나도 합당한 예산안 심의 과정이다. 민생예산 삭감을 감행한 정부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부조리한 예산 삭감을 시작으로 국민의 혈세가 어떻게 쓰이는지 더 깊이 살펴보는 국회가 되길 바란다. 또한 그들만의 공경과 상식의 나라가 아닌 주권자인 국민의 공경과 상식의 나라이어야 한다.

야당은 공수가 전환된 예산정국 투쟁에서 민심을 받들어 잘 헤쳐가길 바란다.

기고

지방인구 소멸 시대, 자치단체의 대응



곽복텔  
강진군 문화관광홍보담당관

전남은 현재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 하나이다. 정부는 226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86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했으며, 그 중 전남의 16개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지방 인구 소멸 문제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이슈로, 많은 국가들이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전남 농어촌 지역의 산업 구조는 자영업 중심의 3차 산업 비중이 높지만,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과 젊은 층의 유출이 지역 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는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25년부터 보통교부세 개편 방안에서 출산 장려 비율을 확대하고, 행사성 경비에 대한 페널티를 폐지할 예정이다. 또한, 2026년부터는 보통교부세에 생활 인구 수를 반영하고, 저출생 대응 비율을 부동산 교부세에 25% 신설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이와 비슷하게 일본은 지역 이주 촉진 프로그램을 통해 도시에서 지방으로의 인구 이동을 유도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주 촉진 활동'을 통해 지방에서 살기

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세금 감면이나 주택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하며, 지역 주민과 외부 인력 간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취업 정보 제공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일본은 지방의 빈집 문제와 인프라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스마트 시티 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사이타마현의 '스마트 타운' 프로젝트는 인공지능(AI)과 IoT 기술을 활용해 지역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증대시키고, 인프라 관리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있다.

강진군은 일본의 '이주 촉진 활동'보다 한발 더 나아가 '농촌 빈집 활용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청년 및 이주민에게 거주 공간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군은 빈집에 대해 실태 조사를 한 후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까지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한다. 또 신규 주택을 건축하면 50%, 최대 3000만 원을 지원하여 전입 인구 유치에 힘쓰고 있다. 이 정책은 행정안전부 주최 '2024년 전국지방자치대전'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또한, 강진군은 생활인구 증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강진 반값 여행' 정책을 펴고 있다. 예를 들어, 부산에 사는 4인 가족이 강진을 방문하여 20만 원을 소비하면 그 절반인 10만 원을 강진 지역화폐로 돌려받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강진의 농특산물 판매가 촉진되고, 다양한 관광지를 저렴하게 경험할 수 있어 관광객들의 재방문율을 높이고 있다.

지난 11월 7일, 국회 저출생·축소사회 대응 포럼 소

속 백해된 의원을 포함한 10명의 의원들이 강진을 방문하여 강진군의 선도적인 정책 사례를 현장에서 청취했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는 강진군의 '1000 원 택시'와 '반값 관광' 정책에 대해 정책자료와 노하우를 제공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강진군의 저출산 및 지방 소멸 대응 정책이 범정부적인 제도로 확산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중요한 전환점을 의미한다.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는 현재 수출 부진과 내수 침체에 직면해 있으며, 이러한 경제 상황에서 확대 재정 정책으로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이는 시장의 경기조절 기능을 맡기는 자유주의 경제에서 정부가 시장에 적극 개입하는 케인즈주의 경제 정책으로의 전환을 뜻한다. 코로나19 이후의 경기 침체와 지방인구 소멸로 인한 시장의 불안정성은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케인즈는 이를 '펌프 프라이밍(Pump Priming)' 경기 부양의 개념으로 설명했다. 이는 마른 펌프질을 시작할 때 한 바가지의 물이 필요하듯 지금의 시기가 국가의 투자가 필요할 때이며, 그 후 시장의 투자와 경제 활동이 활발해지는 구조를 말한다.

강진군의 '농촌 빈집 활용 정책', '반값 여행 정책', 출산 장려 정책 등은 모두 지역 경제라는 '펌프'에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 그 마중물이 시장에 유입되어 고용을 창출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소득은 다시 구매로 이어져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자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전략이자, 지역 경제 활성화의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